

도내 노인학대 신고 4년새 2.4배 급증 ‘가정 문제 아닌 초고령사회 그림자’

2020년 133건에서 지난해 321건… 검거자 둘 중 한명은 ‘배우자’
민주 한병도 의원 “정부, 노인보호 전문 인력 확충 등 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4년 새 68%나 급증한 가운데, 전북 지역의 노인학대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학대 검거자 중 절반 이상이 배우자로 확인되면서, 노인학대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닌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133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321건을 기록하며 4년 만에 2.4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9,707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4년 1만 6,30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 전북의 증가 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

올해 2025년 8월까지 전북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이미 350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건수(321건)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학대 검거 인원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전북 지역 노인학대 검거 인원은 2020년 26명이었으나, 2023년 58명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90명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63명이 검거된 상태다.

노인학대 가해자 유형을 전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2024년 검거된 노인학대 가해자 3,466명 중 배우자가 1,891명, 자녀(손자녀 포함)가 1,419명으로 집계되어, 전체의 95.5%가 친족 가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검거자 중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4.6%에 달해, 노인학대

검거자 둘 중 한 명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 검거 건수를 보면 지난해 전체 3,372건 중 2,564건이 신체적 학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정서적 학대 검거 건수가 2020년 201건에서 2024년 420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한병도 의원은 이와 같은 노인학대 급증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학대는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피해 확산을 막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인보호 전문 인력 확충, 조기 방지 시스템 도입,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호 기자

코레일-SR 통합 방향 잡히나

국토부, 2차 간담회 열고 의견 청취… 통합 따른 문제점 등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김운덕·사진)가 2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 통합논의의 2차 간담회를 열고 의견청취에 나섰다.



특히 이날 논의에 따라 통합 방향이 가닥을 잡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2차 간담회가 김운덕 장관을 비롯해 코레일, SR과 이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열렸다.

앞서 김운덕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20일 1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효과와 쟁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코레일과 SR 등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입장과 통합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설명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 측은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행권 확대로 코레일의 재

정 건전성 강화, 중복 비용 절감, KTX 요금 인하 등도 통합이 필요한 주요 근거로 주장했다.

반면 SR과 SR 노조 측은 가격·서비스 개선 등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 운영이 필요하며 맞서고 있다. 통합으로 철도 서비스 독점화, 소비자 선택권 축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쟁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분리하자는 취지다.

이날 열리는 2차 간담회에서는 ‘비용 절감’이나 ‘운영 횡수 증대량’, ‘안전 문제’ 등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 등을 놓고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일 1차 간담회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김 장관은 코레일과 SR 측에 2차 간담회를 대비해 통합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정리해 오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관별로 통합 전후에 대한 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2차 간담회에는 지난 1차 간담회에 불참했던 철도노조도 참석해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권희성 기자

김관영 도지사, 추석 맞아 군장병·소방대원 격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관영 도지사가 29일 육군 제35보병사단을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노홍석 행정부지사와 김종훈 경제부지사로 도내 주요 군부대와 119안전센터를 찾아 장병과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재난 대응과 지역 안전 수호에 헌신한 군·소방 인력에게 도민을 대신해 고마움을 전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지사의 방문지는 육군 제35보병사단이며, 행정부지사는 익산 지역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 제7공수특전여단, 팔봉119안전센터를 찾았다. 경제부지사는 군산 지역의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와 산북·지곡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이들은 각 현장에서 장병과 소방대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여름철 수해와 각종 사고 대응에 적극 협력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군 제35보병사단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김광석 35사단장 등에게 지역 안전 수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전주·김제 통합, 국가 제2경제권 도약의 길”

전주김제시민연합회
7대 상생 사업 제안

전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주·김제 통합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김제에 뿌리를 둔 인사들과 전주 시민들로 결성된 전주김제시민연합회 50여명은 2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김제 통합시 출범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7대 상생 사업을 제안했다.

이번 집회는 전북발전협회(회장 최석규 전북대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되어 최석규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조승현 전북대 사회학과 대학원 학장이 머리말 발언을 했다.

이어 전주와 김제를 대표한 시민들이 통합시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진식 전 김제시장은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한주 신세계병원 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북 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

전주김제시민연합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북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산업 공동화, 청년층 유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의 김제와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통합을 통해 전북은 대한민국 제2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통합시 출범과 함께 추진할 7대 상생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제에 통합시 청사를 이전하고, 백산 지구에 SRT·KTX역을 신설해 서울과 전북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김제에 뿌리를 둔 인사들과 전주시민들로 결성된 전주김제시민연합회 50여명은 2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김제 통합시 출범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7대 상생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백산 지구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피지컬 AI 산업단지를 구축해 제조·물류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을 통합시 관할에 두어 국제 물류 중심지로 키우고, 전주·김제 대중교통을 단일화하는 한편 농어촌 주민을 위한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통합시 이름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승현 회장은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주와 김제가 각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통합은 전북이 살아남는 마지막 길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말했다.

김한주 신세계병원 원장은 “통합시 출범은 전북이 준광역시 특례시로 지정될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경

제권을 형성해 대한민국 제2경제권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현실로 만드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전주김제시민연합회는 또 “전주·김제 통합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역사적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라며, 전주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조속히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가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함께해 통합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전주김제시민연합회는 “이번 자리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새만금 신항과 피지컬 AI 산업을 중심으로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여 전북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전주와 김제간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국가 균형발전 과제”

도내 기독교계, 정상화 촉구

전북 기독교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정상화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2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전북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7개 교회 기관의 대표자 19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을 통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오정현 전북기독교신문 전무는 도민과 언론을 향해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조류 충돌 위험성’과 ‘갯벌 환경 영향 검토 부족’은 공항이 지닌 더 큰 공익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전북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자 미래 세대에 희망을 물려주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기독교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이미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확정되었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국가적 신뢰가 보장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97개 기업이 약 14조7,000억원



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믿은 선택이자 신뢰의 증표라고 설명했다.

항만과 철도, 도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항이 더해져야만 새만금 산업단지와 지역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을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항만, 철도,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공항이라는 관문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 전북을 국제 물류·산업·관광의 중심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이동권, 기업의 신뢰,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더 큰 가치들을 가볍게 다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선심성 SOC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전략적 사업”이라며 “수도권만 성장하는 대한민국은 건강할 수 없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호 기자

“지역경제 위협… 익산 코스트코 입점 안될일”

도내 소상공인·시민단체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 추진에 반대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29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초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박춘관 이사장과 직능경제인단체 연합회 전북지회 임규철 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특수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코스트코 익산 입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춘관 이사장은 “전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전북에서 코스트코 익산 입점은 자영업 몰락을 부르는 행위”라며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고용 창출은커녕 기존 점포들은 인력 감축에 내몰리게 된다”며 현실적인 피해를 호소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초대형 참고형



매장은 인근 전주·완주·정읍까지 광역 상권을 흡수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특히 전북은 자영업 의존도가 높고 영세 상인의 비중이 커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스트코는 수익 대부분을 해외 본사로 송금해 지역경제 순환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며 “이는 사실상 경제 지체행위”라고 규정했다.

참석자들은 정현을 익산시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역경제보다 정치적 입지만 행진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현재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